

탈탄소 DX투자에 세금 우대, 개정 경쟁력강화법 통과

2021. 6. 9. 일본경제신문

기업의 온난화 대책과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는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관련 6법이 9일의 참의원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, 성립했다. 두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면에서 우대하는 것이 핵심. 실제 장소를 마련하지 않는 완전 온라인 주주총회도 허용하겠지만 개최가 집중되는 6월 중 총회 일정은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자민당 및 공명당은 2020년 말에 정리한 세제 개정 대강령에서, 탈탄소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(DX)을 추진하는 기업은 투자 계획을 정부에 인정되면 감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결정했다. 개정 경쟁력강화법 등 관련법은 이 계획에 관한 지침이나 절차를 규정했다. 올여름에도 시행해 기업으로부터 계획 신청을 받는다.

탈탄소로 이어지는 제품의 생산설비나 제조공정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설비를 도입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10%를 법인세액에서 빼준다. 환경 대응 자동차용의 축전지 등이 대상이 된다. DX를 추진하기 위한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는 최대 5%를 세액공제 한다.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사업 계속을 지지하는 조치도 담았다. 세무 상 적자를 이월해 다음 분기 이후 흑자와 상쇄해 주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로 중견·대기업의 공제 상한을 이월 공제 전 소득금액의 50%에서 최대 100%로 높인다.

일본정부는 이르면 월내에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완전 온라인화를 해금할 예정이었다. 경쟁력강화법 개정안 조문에 여러 오류가 있어 국회 심의가 늦어져 예상보다 통과에 시간이 더 걸렸다. 소집통지 인쇄나 발송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6월 총회부터의 적용은 늦었다.

개정 산업경쟁력 강화법 통과, 탈탄소 및 디지털화 추진 지원

2021. 6. 9 NHK

탈탄소와 디지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이 9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개정안은 지난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.

이번 개정은 탈탄소나 디지털화등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, 산업구조의 전환을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.

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온실효과 가스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나 자사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업무의 효율화를 실시했을 경우에 법인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해 투자를 지원합니다.

또 지금까지는 상장사 주총이 회의장 설치를 조건으로 이사회 주주의 인터넷 참가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사전 확인을 받으면 완전 온라인 형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개정으로 탈탄소 및 디지털화 세금 경감 조치는 금년부터 적용되며 완전 온라인 주주총회는 시행을 위한 절차가 월내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.